

보도시점 2024. 2. 7.(수) (배포 후 즉시) 배포 2024. 2. 7.(수)

수도권대기환경청, 통합관리사업장 100개소 정기검사

- 2024년, 공정개선 및 악취 관리 중점 점검 -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수도권 지역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적정 관리를 위해 관내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관련 7개 법률 소관, 10개의 인·허가 시설을 통합하여 최적 관리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는 제도로,
 -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1년~3년 주기로 관할 환경청 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 현재 수도권대기환경청 관할 통합관리사업장은 전기업, 폐기물처리업, 철강 비철, 석유화학, 제지, 전자부품 등 14개 업종, 172개소(서울 18, 인천 37, 경기 117)이며,
 - 이중 올해 정기검사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 37개소와 정기검사 주기 도래 사업장 63개로, 총 100개소이다.
- 중점 점검사항은 △허가조건 이행여부, △배출·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자동 측정기기 관리현황, △자가측정 이행 여부 등이며,
 - 사업장 특성에 따라 대기·수질·악취·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측정하여 허가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이번 검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개선명령,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 등 위반 사안별로 조치할 예정으로,
- 지난해에는 정기검사 91개소를 포함한 총 110개소를 현장 점검하여 환경 법령 위반사업장 37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한 바 있다.
- 아울러, 현장 점검시 최적가용기법(BAT) 적용, 배출·방지시설 개선 및 적정 운영·관리 방안 제시 등 통합환경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병행하고,
- 통합환경관리 개선 협의체를 통해 환경 관련 제도, 최신 기술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장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사업장 자율환경 관리를 위한 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
-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올해는 악취발생 우려가 큰 제지사업장, 하수 처리장 등이 사후관리 대상이 되었다”면서, “주민생활에 악취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2024년 통합관리사업장 정기검사 계획 1부
 2. 통합환경관리 제도 개요 1부. 끝.

담당 부서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	책임자	과 장	이수영 (031-481-1351)
		담당자	주무관	심희진 (031-481-1489)

1 추진 배경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통합 허가조건 이행 여부, 배출·방지시설 적정운영, 허가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을 위한 정기검사

2 정기검사 계획

- (기간) '24. 2월 ~ 12월
- (대상) 통합허가 사업장 100개소('23년 허가 완료 사업장 37개소, 검사 주기 도래 사업장 63개소)
- (점검기관)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기관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역할	정기검사 총괄, 대기 시료 측정·분석	수질시료 분석	악취·다이옥신 시료 측정·분석, 기술지원

3 점검내용

- (사전검토) 자가측정, 연간점검보고서 등 사업장 제출 자료 검토
- (현장점검) △허가조건 이행 여부, △허가서와 현장 시설 일치 여부,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측정기기 관리 현황, △총량관리 현황 등
- (오염도 검사) 대기·수질·악취·다이옥신 등 주요 배출구의 허가배출 기준 항목에 대한 오염도 검사

4 향후 계획

- 위반사항 적발 시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과태료 부과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허가

- (허가통합) 사업장의 효과적인 오염물질 저감 및 최적 관리기법 적용을 위해 수질·대기·폐기물 7개 법령,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
- (적용대상) 환경영향이 큰 20개 업종의 대형 사업장(대기·수질 1·2종)을 대상으로 하며, '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기존사업장은 유예기간 4년 부여)

<통합환경관리제도 업종별 시행시기>

	[17-'20]	[18-'21]	[19-'22]	[20-'23]	[21-'24]	[23-'27.6]
업종(22개)	3개	3.5개	3.5개	3개	6개	1개
업종	발전 증기공급 소각	비철금속 철강제조 합성고무 석유화학	석유정제 비료제조 화학제품 무기화학	펄프·종이 기타 종이 전자제품	플라스틱, 섬유,주류, 도축·육류 자동차부품 반도체	시멘트 제조업
← 통합 허가 완료 →						

※ 통합허가 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기준

② 배출영향 분석을 통한 허가배출기준 설정

- (배출영향분석) 주변지역(지표면, 하천 등)에서의 기존오염도, 추가오염도 등을 산정하여 오염물질이 주변 환경(대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
- (맞춤형 허가)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사업장별·배출구별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건강 및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해 허가조건 부여

③ 19개 업종별 최적가용기법(BAT) 마련·배포

- (최적가용기법-BAT) 원료투입→생산→배출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현재 기술·경제적으로 적용가능한 환경관리 기법

※ 최적가용기법 BAT - Best Available Technique

- (기준서 마련)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배포하여, 배출·방지 시설 설계,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작성 등의 지침서로 활용(5년마다 재검토)

④ 주기적 허가 재검토

- 허가·변경허가 후 기술발전, 주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할수 있도록 5년마다 허가배출기준, 허가조건 등을 재검토
-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을 평가, 재검토 주기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⑤ 사후관리 체계 개편을 통한 사업장 자율관리 강화

- 연 4회~20회 수시점검 → 1년~3년에 1회, 5일~8일 정기 정밀점검
- 적발 위주 단속에서 벗어나,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 진단 및 기술 지원 방식으로 전환(민원 및 불법배출 의심시 수시점검 가능)

⑥ 정보공개 제도

- 통합허가시스템(<https://ieps.nier.go.kr>)을 통하여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현황 4개 분야 공개 중
 - (공개사항) △연료 및 용수사용, △배출시설 종류 및 위치, △허가 배출기준 및 최근 5년 배출량, △환경사고 시나리오 및 대응책